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8180 |
|----------|-------|

발의연월일 : 2022. 11. 9.

발 의 자 : 권인숙 · 기동민 · 김상희  
김주영 · 김철민 · 남인순  
서동용 · 신정훈 · 유정주  
이성만 · 이원욱 · 최혜영  
한준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최근 신당역 스톱킹 피해자 살인사건 발생으로 스톱킹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스톱킹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스톱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지원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스톱킹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 근거 마련, 경찰의 현장 출동 및 조사, 무료 법률 지원, 신변안전 조치 등의 필요성을 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스토킹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국가기관 등에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을 지원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처함(안 제13조 및 제22조).
- 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교육훈련시설, 보수교육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사.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정보의 삭제를 지원함(안 제19조).
- 아.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경찰관서의 협조와 스토킹 신고 시 사범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톱킹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스톱킹행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스톱킹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자 등”이란 스톱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 주변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톱킹범죄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범죄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범죄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지원서비스 제공
5.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구조 및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6.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관 설치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운영
7. 스토킹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스토킹 범죄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9.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10.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스토킹범죄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톱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톱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톱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톱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취학 지원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등과 피해자의 가족구성원(피해자가 보호 또는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성년자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취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등을 알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게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등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자 유급휴가 지원) 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피해자가 상담, 병원치료,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출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기간 외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피해자 등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



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제14조(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톱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스톱피해자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스토킹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 계획의 수립
  3.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4.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5.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는 업무
  6.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출석 등 동행 및 신변안전조치 지원
  7. 스토킹에 대한 신고와 손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8.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9. 스토킹범죄 및 스토킹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의 설치·운영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제3항에 따른 위탁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의 장, 상담원 또는 종사자는 피해자 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8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의 장, 상담원,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2조에 따른 유급휴가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람 또는 사용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사기관의 협조)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사범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범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범경찰관리는 신고된 장소, 피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범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범경찰관리는 피해자 등·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정보를 누설한 사람

제23조(과태료) ①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